

주간 통일정세

2016-3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김정은, 누구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민을건 자기 힘뿐(연합뉴스)
	8.13	北 최룡해 쿠바 방문...피델 카스트로 생일선물 전달(연합뉴스) 리용호 北외무상, 다음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미국의소리)
	8.15	北, 광복절 맞아 "통일은 민족최대 과업" 대화공세(연합뉴스)
	8.16	前 北주재 브라질대사 "최룡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안만나"(연합뉴스)
		北 최룡해 베이징 경유해 귀국...중국과 접촉 없어(연합뉴스)
		北리수용 부위원장, 민주공고서 인민당 총비서 면담(연합뉴스)
		北매체, 웹사이트에 대남 적개심 고취 게임물 게시(연합뉴스)
	8.17	최룡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만나...단독 면담은 아냐(연합뉴스)
		'아프리카 순방' 北리수용, 앙골라 도착(연합뉴스)
	8.18	北 김정은, 과수농장·돼지공장 시찰(연합뉴스)
北, 33년만에 민주여성동맹 대회 11월 중순 개최(연합뉴스)		
대북소식통 "北, 해외주재 외교관 무역일꾼 가족 소환령"(연합뉴스)		
8.19	北 유럽지역 자금책, 지난해 수십억 원 들고 잠적(연합뉴스)	
	北 김정은, 전국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지시(연합뉴스)	
경제	8.14	北中, 교역·밀무역 모두 살아나...제재공조 균열 조짐(연합뉴스)
		요미우리, "中, 대북 원유공급·무역확대 움직임"(연합뉴스)
	8.15	북중교역 거점 중라오닝 단둥 "개방수준 높이고 항구기능 확대"(연합뉴스)
	8.17	신의주에 중국인 투자 몰려...택시회사 영업 시작(연합뉴스)
북중교역 거점 단둥서 대북제재 이완 조짐...교역 급증세(연합뉴스)		
사회 문화	8.14	北 회령시 보안서, 여행증명서 부정발급하다 적발(연합뉴스)
	8.17	北, 평양 능라도 맞은편에 최대 규모 쇼핑몰 건설중(연합뉴스)
	8.18	북한, 만화영화도 시청 금지령(연합뉴스)
	8.19	북중 접경 북한식당 석달째 "남조선 손님은 사절"(연합뉴스)
	8.13	北, B2 폭격기 괌 배치 비난...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진입(연합뉴스)
	8.14	美 北페이퍼컴퍼니 실태 조사...제재 실용성 높인다(연합뉴스)
	8.15	北김정은, 광복 71주년 맞아 푸틴과 축전 주고받아(연합뉴스)
	8.17	北, 美폭격기 전진배치 비난...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외교 국방		日정부, 北 5차 핵실험 언급 주시...한미와 연대해 대응(연합뉴스)
		北, 핵무기 원료용 플루토늄 생산했다...핵실험 중단 안한다(연합뉴스)
	8.18	北 “관문점도끼사건은 美 조작” 억지 비난(연합뉴스)
		북한, 아프리카서 대사 임명에 외교적 결례(연합뉴스)
		北, 평양 외곽에 새 고사포 기지 건설(연합뉴스)
	8.19	美관리, 北핵무기 기술발전 탓에 핵공격시 조기경보 불가능해져(연합뉴스)
		미 본토 겨냥 北 ICBM 대응한 장거리레이더 개발작업 순항(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8. 13.

■ 김정은, 누구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민을 건 자기 힘뿐(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민을 건을 자기 힘밖에 없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화학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우리가 잘살고 강성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비열한)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민을 건을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무영 내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이 동행함.

2016. 8. 18.

■ 北 김정은, 과수농장·돼지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돼지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과일 생산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면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 속에서도 예년에 없는 과일 대풍이 이룩된 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오수용 부위원장장과 조용원 부부장이 동행했고, 최부일 인민보안상과 림중환 인민보안성 조직부국장 겸 인민군 중장이 이들을 맞이함.

2016. 8. 19.

■ 北 김정은, 전국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지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 6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각도에 내려졌다”며 “수많은 건설과제에 밀려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은 요즘에야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아울러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인민들의 편리한 교통과 안전을 위한 김정운의 크나큰 배려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변변한 차도도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웬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8. 13.

■ 北 최룡해 쿠바 방문·피델 카스트로 생일선물 전달(연합뉴스)

- 지난 11일(현지시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출국한 최룡해(66)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했다고 쿠바 관영통신 ACN이 12일 보도함.
-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최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와 협력을 주제로 환담함.
- 최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과 쿠바를 거쳐 4일 오전 리우에 도착한 최 부위원장은 11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출국 시기를 하루 앞당긴 바 있음.

■ 리용호 北외무상, 다음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미국의소리)

- 지난 5월 취임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유엔 관계자 등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VOA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리 외무상 일행과 미정부 관리들과의 회동은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리 외무상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언급한 바 있음.

2016. 8. 16.

■ 前 北주재 브라질대사 “최룡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안만나”(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또다시 나옴.

- 호베르투 콜린 전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내가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은 최 부위원장이 다른 국가 정상급 인사들과도 만났다고 보도했으나 별도 회담이 아닌 IOC 만찬이나 올림픽 개회식에서 잠시 만나 의례적으로 인사한 것을 과대 포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됨.

■ 北 최룡해 베이징 경유해 귀국…중국과 접촉 없어(연합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참석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감.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룡해 부위원장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발해 쿠바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지난 15일 베이징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머문 뒤 16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름.
- 지난 4일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최 부위원장은 북한 올림픽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했으며 지난 11일 쿠바에서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만난 뒤 15일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함.

■ 北리수용 부위원장, 민주콩고서 인민당 총비서 면담(연합뉴스)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앙리 모바 사카니이 민주콩고 인민당 총비서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총비서에게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정당성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해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입장을 강조하였다”고 전함.
- 두 사람의 회담에는 조영남 주 민주콩고 북한 임시대리대사와 셀레스텡 툰다 야 카센테 부총비서를 비롯한 민주콩고 인민당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함.

2016. 8. 17.

■ 최룡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 만나…단독 면담은 아냐(연합뉴스)

-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관차 브라질을 방문했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4년 반 동안 평양에 주재하다 최근 에스토니아로 임지를 옮긴 호베르투 콜린 대사는 “브라질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며 “단독 면담이 아닌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VOA는 밝혔.
-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사를 전했고, 테메르 권한대행도 양국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아프리카 순방’ 北리수용, 앙골라 도착(연합뉴스)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하고 이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16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했다”고 전함.
- 킌사사 비행장에서는 셀레스텡 툰다 야 카센테 부총비서를 비롯한 민주콩고 인민당 지도부와 조영남 민주콩고 주재 북한 임시대리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함.

2016. 8. 19.

■ 北 유럽지역 자금책, 지난해 수십억 원 들고 잠적(연합뉴스)

-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으로 북한 주요 인사들의 탈북이 조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내 북한 주재원이 지난해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한 노동당 39호실 소속 A 씨가 지난해 주재하던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잠적했다”면서 “그가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자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
- A씨는 유럽의 한 국가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이 지역의 북한 자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짐.

다. 공식행사

2016. 8. 18.

■ 北, 33년만에 민주여성동맹 대회 11월 중순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로 구성된 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대회를 33년 만에 개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가 주체 105(2016)년 11월 중순에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함.

-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가입대상이었지만 5차 대회 이후로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로 변경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8. 16.

■ 北매체, 웹사이트에 대남 적개심 고취 게임물 게시(연합뉴스)

-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 웹사이트에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게임물을 게시하고 있음.
- 16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회화화하며 클릭할 때마다 주먹으로 때리는 오락게임 등 총 15개의 게임이 게시돼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4월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뿐 아니라 대남 선전선동을 위한 기사·사진·영상·게임 등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음.

2016. 8. 18.

■ 대북소식통 “北, 해외주재 외교관·무역일꾼 가족 소환령”(연합뉴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 공사의 탈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당국의 해외주재 외교관 및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8. 15.

■ 北, 광복절 맞아 “통일은 민족최대 과업” 대화공세(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대화 공세'를 펼치는 한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조국이 해방된 지 장장 70여년이 되는 오늘에도 민족분열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8. 14.

■ 北中, 교역·밀무역 모두 살아나...제재공조 균열 조짐(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상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중국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지방정부 세관 공무원들은 대북제재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말하지만, 분위기가 완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힘.
- 지난달부터 시작된 중국인 대상 북한 신의주 반나절 관광이 인기를 끄는 등 북·중 간 관광이 활기를 띠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 퇴색되고 있는 징표라는 분석도 있음.

■ 요미우리, “中, 대북 원유공급·무역확대 움직임”(연합뉴스)

-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및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 송유관 시작 지점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외곽 원유저장 시설과 헤이룽장(黑龍江) 성 다칭(大慶)유전을 오가는 화물열차의 운항이 대북제재 초기 하루 1편에서 6월 하순께부터는 2~3회로 늘었음.

- 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드 배치를 경정한 한미,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연대해 중국에 맞서는 미일에 대한 압력용 측면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함.
- 다만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북한이 5차 핵 실험이나 추가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대북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임.

2016. 8. 15.

■ 북중교역 거점 中랴오닝 단둥 “개방수준 높이고 항구기능 확대”(연합뉴스)

-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항구기능을 확대키로 해 대북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15일 중국 단둥뉴스망에 따르면 단둥시정부는 최근 ‘이항흥시’(以港興市·항구를 통해 시를 부흥시키다) 전략을 확정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 확대키로 함.
- 거징(葛精) 단둥시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이 “국경 개발 및 개방시험구를 조성해 국가 비준을 받고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경제무역합작구를 설치해 많은 중국기업이 위탁가공업 등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6. 8. 17.

■ 신의주에 중국인 투자 몰려…택시회사 영업 시작(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 접경 도시인 신의주에 중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신의주에 합작형태로 봉제공장을 운영한다는 중국인 사업가는 최근 RFA에 “신의주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인 투자 사업체가 많이 있다”며 “이 기업들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밝힘.
- “신의주와 혜산시 등 북한 국경 도시에 생겨난 편의점도 대부분 중국인이 투자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개인 사업가와 신의주시 당국 사이에 신의주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상담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 북중교역 거점 단둥서 대북제재 이완 조짐…교역 급증세(연합뉴스)

-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근 양측 교역이 급증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가 일부 이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북중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 압록강대교(중국명 중조우의교)의 임시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무역상들이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면서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접경의 소식통은 “유엔 대북제재 이후 중국 해관(세관)이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한동안 다리 통과 차량이 뜸했으나 최근엔 트럭이 쉬지 않고 북한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8. 18.

■ 북한, 만화영화도 시청 금지령(연합뉴스)

- 북한이 지금까지 허용해오던 이동영상물(만화영화)에도 시청 금지령을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RFA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직접 수입해 방영했거나 밀수로 유입된 한국의 불법 만화영화들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시청 금지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최근 중앙에서 각도의 학교들과 인민반들에서 아동만화영화 ‘로빈후드’의 유포와 시청을 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세계명작의 하나인 ‘로빈후드’는 포악한 왕과 부패한 관리, 탐욕스러운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내용”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RFA에 “중앙에서 최근 아동 영상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로빈후드’는 물론, 비밀리에 유통되는 미국 만화영화 ‘심슨 패밀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고 말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8. 14.

■ 北 회령시 보안서, 여행증명서 부정발급하다 적발(연합뉴스)

- 북한의 중앙 부처가 통행증(여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함경북도 회령시의 보안서(경찰서)를 직접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RFA에 “(검열에 나선 것은) 누군가에게 평양행 통행증을 발급했는데, 그 사람이 평양에서 나쁜 짓을 해서 체포됐기 때문”이라며 “중앙으로부터 보안서에 대한 집중 검열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라고 말함.
- 이시마루 대표는 “그것 때문에 ‘어디서, 누가 발급했는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한다”며 “회령시 보안서에서는 이 문제가 커져서 공포 분위기까지 생겼다고 들었다”고 전함.

라. 사회 동향

2016. 8. 17.

■ 北, 평양 능라도 맞은편에 최대 규모 쇼핑몰 건설중(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능라도 맞은편에 최대 규모의 통합쇼핑몰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17일 보도함.
- NK뉴스가 공개한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능라도에서 남쪽으로 맞은편 기슭에 대형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포착됨.
-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NK뉴스에 “외관이 매우 현대적이며, 입지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좋은 곳”이라며 “한국의 대형쇼핑몰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함.

2016. 8. 19.

■ 북중 접경 북한식당 석달째 “남조선 손님 사절”(연합뉴스)

- 중국의 북중 접경에 있는 북한식당들이 석달째 한국인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음.
- 19일 오전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을 계기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식당들을 둘러본 결과, 한국인 손님을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음.
- 접경지역인 선양과 단둥(丹東) 등지의 북한식당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잇달아 발생한 북한식당 종업원 탈출로 지난 6월 초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명에 따라 한국인 출입을 사절하고 있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8. 13.

■ 北, B-2 폭격기 괌 배치 비난…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진입(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과 관련,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라고 위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괌도에 'B-52', 'B-1B', 'B-2A' 등 미국의 3기종의 전략폭격기가 처음으로 동시 배치되게 되었다”면서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싸드(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핵전략 폭격기 'B-52H'만 상주시키던 괌도에 연이어 'B-1B'와 'B-2A'들을 전진 배치한 것은 조선(북한) 침략기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이어 “핵 선제공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움짱하면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위협함.

2016. 8. 14.

■ 美, 北페이퍼컴퍼니 실태 조사…제재 실용성 높인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북한의 광물수출 및 부정송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정부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함.
-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외화를 계속 확보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임.
-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호주, 일본 외교 당국자와 만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북한의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동시에 미국 주요 금융기관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함. 미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북한계 기업임.

2016. 8. 17.

■ 北, 美폭격기 전진배치 비난…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미국이 최근 B-2 등 전략폭격기를 잇달아 괌에 전진 배치하자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책 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히 엄중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앞서 미군은 지난 6일 B-1B 폭격기를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콰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미주리 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 3대를 콰에 배치한 바 있음.

2016. 8. 18.

■ 北 “판문점도끼사건은 美 조작” 억지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40주년인 18일 사건이 미국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하며 지금도 판문점에서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판문점 사건이 “남조선을 영구 강점하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미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며 “음흉한 계책으로부터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던 중 미 2사단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가 북한 군인 30명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임.

2016. 8. 19.

■ 미 본토 겨냥 北 ICBM 대응한 장거리레이더 개발작업 순항(연합뉴스)

-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이용한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비, 알래스카에 배치하기로 한 최신행 장거리식별레이더(LRDR) 체계 개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LRDR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브래드 힉스 부사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오는 2020년까지 알래스카에 배치·가동할 LRDR 개발작업이 10개월째 순항하고 있다고 밝힘.
- 힉스 부사장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특히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지원하는 LRDR이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MC) 체계와 연결될 것으로 전망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6. 8. 17.

■ 日정부, 北 5차 핵실험 언급 주시...한미와 연대해 대응(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7일 북한이 원자력연구원을 통해 교도통신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과 연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임.
-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일본 정부는 오는 23, 24일을 축으로 도쿄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요청할 방침임.

라. 북·러 관계

2016. 8. 15.

■ 北김정은, 광복 71주년 맞아 푸틴과 축전 주고받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음.
- 김 위원장은 15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해방 71돌에 즈음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귀국 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양국은 앞서 ‘친선의 해’로 선포했던 지난해에도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음. 이후 러시아 국경절,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등 계기마다 ‘축전 외교’를 펼치고 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8. 18.

■ 북한, 아프리카서 대사 임명에 외교적 결례(연합뉴스)

-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으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 대사 임명을 놓고 외교적 걸레를 범해 해당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RFA는 북한이 지난 5월 외교관 김영수(59)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을 받았지만 이보다 한 달 앞서 탄자니아로부터 김영수를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힘.
 - 김영수는 현재 탄자니아 대사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 지리는 현재 공석임.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17.

■ 北, 핵무기 원료용 플루토늄 생산했다…핵실험 중단 안한다(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됨.
- 북한이 2013년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무기 연료로 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힘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16. 8. 18.

■ 北, 평양 외곽에 새 고사포 기지 건설(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외곽에 새 고사포 기지를 건설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분석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평양의 동쪽 지역에 고사포 기지 세 곳을 새로 만들었으며, 기존에 있던 고사포 기지 한 곳은 지하시설을 마련하고 기능과 규모를 확장하는 등 전력을 보강했다고 밝힘.
- 멜빈 연구원은 RFA에 “북한은 지난 수년간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고사포 기지를 건설해 왔다”며 “고사포 기지 인근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평양과 미사일 기지를 보호하려는 재래식 전략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함.

■ 美관리, 北핵무기 기술발전 탓에 핵공격시 조기경보 불가능해져(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 시 사전탐지

- 후 경보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익명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이 미국 정부의 최신 기밀에 정통하다고 밝힌 이 관리들은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을 더이상 ‘이론적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또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이 단 몇 초 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 관리들은 덧붙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13		美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한국 방문...주한미군 순시(연합뉴스)
	8.16		밀리美 육군총장 방한...사드배치 관련 보고청취(연합뉴스)
	8.17	한미일 싱가포르·쿠웨이트·앙골라 등에 대북 독자 제재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13		中관영매체 '사드압박' 재점화...최대통령 對中성과 지웠다(연합뉴스)
	8.14		中, '사드 보복' 위해 한국 무역·투자·M&A 제한 검토중(연합뉴스)
	8.15		中,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추진 전략 불변(연합뉴스)
			중국 연일 도널드 트럼프는 '사드압박'...현재 한국은 난세(연합뉴스)
	8.16		中 '사드압박' 지속...한·미, 민의 무시한 채 배치 강행(연합뉴스)
			中, 사드압박 지속...韓광복절, 사드로 맛이 변했다(연합뉴스)
	8.17		日언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이달 23일 또는 24일 열릴 가능성(연합뉴스)
			中, '한국 반대여론' 집중부각하며 '사드압박' 지속(연합뉴스)
	8.18	최대통령, 내달 4~5일 中 G20 참석...시진핑과 회담여부 주목(연합뉴스)	
8.19			中 해군, 동해서 실전대항훈련...사드·日 겨냥했나(연합뉴스)
			中,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사드·

			센카쿠 논의할 듯(연합뉴스)
			中매체 사드 반대 재개...“北 재처리, 한미 책임” 주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13		日외무성의 도발...한국 여야의원 광복절 독도방문 항의(연합뉴스)
			韓, 광복절前 ‘10억엔 출연’ 합의 희망...사용방법 한국안대로(연합뉴스)
	8.15	정부, 아베 야스쿠니 봉납 정치인 참배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日패전일 맞아 각료 야스쿠니 참배...총무상·올림픽 담당상(연합뉴스)
		여야의원 독도 방문에 日전방위 시비...한국 “수용 불가” 일축(연합뉴스)	日관방장관의 억지...韓여야의원 독도방문 유감(연합뉴스)
8.16		日 극우언론의 ‘적반하장’...“위안부 강제동원은 ‘왜곡’” 주장(연합뉴스)	
			日 언론, 朴대통령 경축사 긍정평가...한일 관계발전에 기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18		[단독]러시아 부총리, 朴 대통령 방러 양국 경험 활성화 계기되길(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14		中, 美 대선전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개시(연합뉴스)
	8.15		中, G20에 회원국 정상 전원참석...韓美와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연합뉴스)
	8.17	美中육군총장, 사드 공방...“中에 위협 아냐” vs “적절 처리해야”(연합뉴스)	

			남중국해에 中 해경선 급증·美기지 겨냥 군사무기 배치 조짐(연합뉴스)
	8.18	중국·북한 동시겨냥·美 동중국해에 강습상륙함 투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16		아베, 오바마 '핵선제불사용' 구상 반대·日피폭지 반발 기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8.13	美 우크라이에 "러시아와 긴장 고조 피하라" 주문(연합뉴스)	
	8.16	'최악분쟁지' 시리아 알레포서 "미러 공동군사작전 거의 합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8.14		日, 센카쿠열도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개발·中 반발할 듯(연합뉴스)
	8.16		中, 센카쿠열도 방어용 日미사일은 개선 시 첫 타격 대상(연합뉴스) 日정부, 센카쿠 해역 中선박 영상 공개(연합뉴스)
중일 관계	8.17	영유권 갈등 中日, 대테러는 협력·내달 4년 만에 협의 재개(연합뉴스) 中, 센카쿠주변 해상서 민병 동원 어선 합동 훈련(연합뉴스)	중일, 센카쿠 갈등 고조·中 해경선 日영해 또 침입해 日 항의(연합뉴스)
	8.18		日, 北미사일 도발 대비 위성 상시 감시망 구축·中 견제 포석도(연합뉴스) 日, 필리핀에 순시선 첫 인도·남중국해 서 中 견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8.14	中, G20 정상회담서 푸틴 최고 주변 대우할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8.19		아베·푸틴, 내달 2일 블라디보스토크서 회담(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8. 13.

■ 美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한국 방문·주한미군 순시(연합뉴스)

-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대장)이 최근 주한미군 순시 차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13일 “브라운 사령관이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을 방문했다”며 “올해 4월 말 취임 이후 첫 순시 차원의 방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브라운 사령관은 방한 기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김현집 연합사 부사령관,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 시어도어 마틴 주한 미 2사단장 등을 만남.

2016. 8. 16.

■ 밀리 美 육군총장 방한·사드배치 관련 보고청취(연합뉴스)

-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오는 23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한다고 미 육군이 발표함.
- 미 육군은 밀리 참모총장이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배치 계획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설명함.
-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력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을 찾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함.

2016. 8. 17.

■ 한미일, 싱가포르·쿠웨이트·앙골라 등에 대북 독자 제재요청(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이 싱가포르, 쿠웨이트, 앙골라, 몰타 등 4개국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함.
- 이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적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외화 공급을 제대로 차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임.

- 몰타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골라는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북한과 우호 관계를 이어옴.

나. 한·중 관계

2016. 8. 13.

■ 中관영매체 ‘사드압박’ 재점화·朴대통령 對中성과 지웠다(연합뉴스)

-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국 관영 언론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 공세가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관영 신문들이 13일자 주말판에 사드에 관한 기사와 전문가 분석을 대거 게재하며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여론몰이’ 작업에 다시 골몰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임.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11면에 게재한 분석기사에서 자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드 배치란 정치적 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이룩한 성과물을 지워버렸다”고 주장함.

2016. 8. 14.

■ 中, ‘사드 보복’ 위해 한국 무역·투자·M&A 제한 검토중(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무역·투자·인수합병 등을 제한 또는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제한하고 한국으로 투자나 인수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 삼성 SDI와 LG화학 등 한국 제조사가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를 모범규준 인증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한편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음.

2016. 8. 15.

■ 中,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전략 불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5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자국의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5일 ‘중국의 병행 추진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중국의 ‘병행 추진’에 관한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병행 추진’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드’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연일 도널드 ‘사드압박’…현재 한국은 난세(연합뉴스)

-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연일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국 최고 지도자 및 정권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교수는 지난 14일 중국청년보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면서 이런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무역·투자인수합병 등을 제한 또는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한류가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하기도 함.

2016. 8. 16.

■ 中 ‘사드압박’ 지속…한·미, 민의 무시한 채 배치 강행(연합뉴스)

-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16일에도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드 때리기’와 압박 공세를 이어감.
- 이날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환종쥘(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관영 중국중앙(CC)TV에 출연,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 국내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식발식 장소에 기자를 파견해 현지의 반대 목소리를 부각하면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 소식도 중점적으로 다룸.

■ 中, 사드압박 지속…韓광복절, 사드로 맛이 변했다(연합뉴스)

-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16일에도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드 때리기’와 압박 공세를 이어감.
-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1면 톱기사로 ‘한국 광복절이 사드 때문에 맛이 변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성주 군민이 식발식을 하며 시위를 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비난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함.

-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전남성주 군민들의 식발식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한국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을 부각함.

2016. 8. 17.

■ 日언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이달 23일 또는 24일 열릴 가능성(연합뉴스)

- 한중일 3국이 오는 23일이나 24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당초 한중일은 외교장관 회담에 원칙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음.
- 지난 16일 한국 외교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의장국 차원에서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中, '한국 반대여론' 집중부각하며 '사드 압박' 지속(연합뉴스)

-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을 동원한 '사드 반대' 여론몰이를 지속함.
- 최근까지 맹공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주 들어서는 보도 분량은 줄고 강도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식발식과 반대 집회 등 한국 내의 반대 여론을 집중부각시키며 '남남갈등' 조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임.
- 17일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정하오(鄭浩)는 전날 봉황 위성TV에 출연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남(타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주장함.

2016. 8. 18.

■ 朴대통령, 내달 4~5일 中 G20 참석...시진핑과 회담여부 주목(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힘.
- 이에 따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G20 계기에 개최국 정상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지 주목됨.
- 한편, 박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 등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다차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됨.

2016. 8. 19.

■ 中 해군, 동해서 실전대항훈련…사드·日 겨냥했나(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18일 동해상에서 군함과 항공병 등을 대거 투입한 가운데 실전 수준의 강도 높은 대항훈련을 실시함.
-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해역에서 중국이 실전 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의 핵 개발,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음.
- 중국 측은 특정 국가를 겨냥했을 것이란 관측을 염두에 둔 듯 “이번 훈련은 연간계획에 따라 이뤄진 정례적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中,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사드·센카쿠 논의할 듯(연합뉴스)

- 중국이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참석시키기로 결정함.
- 이는 그동안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는 의미여서 주목됨.
-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루강(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기자회견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3국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 中매체 사드 반대 재개…“北 재처리, 한·미 책임” 주장(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보도를 계기로 또다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북한이 최근 핵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사드 배치를 택한 한국과 미국 때문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사드 때문에 외교적 시련에 직면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임.
-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새로운 핵 움직임에 책임져야 한다는 제히의 논평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했다는 보도를 자세히 전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 한국,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주장함.

다. 한·일 관계

2016. 8. 13.

■ 日외무성의 도발...한국 여아의원 광복절 독도방문 항의(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13일 한국 여아의원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독도를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축함.
-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이회섭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함.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국회 독도방문단'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할 예정임. 이번 방문에는 같은 당 성일종·강효상·김성태·이종명·윤종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황희,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으로 전해짐.

■ 韓, 광복절前 '10억 엔 출연' 합의 희망...사용방법 한국안대로(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사히신문은 재단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당국자가 “8월 15일 이전 큰 틀에서의 합의”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13일 보도함.
- 아사히는 한국의 광복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 역사가 가장 클로즈업되는 날”이라며 “한국 측은 연설을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15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함.
-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일본국민에게는 다소 불만이 남을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해받기 용이할 것”이라고 말함.

2016. 8. 15.

■ 日패전일 맞아 각료 야스쿠니 참배...총무상·올림픽 담당상(연합뉴스)

-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을 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함.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과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 담당상이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고 신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힘.
-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에 따라 아베 정권이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 **정부, 아베 야스쿠니 봉납·정치인 참배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 정부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물료를 납부하고 일부 각료와 국회의원 등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밝힘.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 및 신사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전문】

1.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2.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관광부장관의 역사…韓여야의원 독도 방문 유감(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광부장관은 광복절인 15일 우리나라 여야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앞서 일본 외무성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우리측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음.

■ **여야의원 독도 방문에 日전방위 시비…한국 “수용 불가” 일축(연합뉴스)**

-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광복절인 15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방위로

역지 시비를 걸었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이런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함.

-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이회섭 주일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여아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함.
-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우선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일본은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ICJ 제소 검토 방안을 거론했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통신은 전함.

■ 日언론, 박대통령 위안부 미언급·사드·북핵발언에 주목(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일제히 주목함.
-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경축사에 관해 “작년까지의 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일본에 촉구했으나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관계 강화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의 이행 상황 등을 경축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日 극우언론의 ‘적반하장’...“위안부 강제동원은 ‘왜곡’ 주장(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야 한다.”, “위안부가 강제연행했다는 사실(史實) 왜곡에 정부가 반론해야 한다.” 광복 71주년인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절이지만 일본에는 2차대전 패전일임. 일본은 이날을 종전일, 또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름.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 책임, 패배 등의 단어를 철저히 배제한 것임. 이날 일본 언론의 사실과 기사도 이런 가해 책임 숨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
- 극우지인 산케이신문은 반성은 고사하고 아베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 강제 연행이 왜곡”이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치는 데 급급함. 이날 산케이신문은 “타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상징적 행위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재개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함.
-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도쿄신문은 “8월 15일은 2차대전의 희생자를 추도하는 날”이라며 “동시에 전쟁의 죄과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음.

2016. 8. 16.

■ **日 언론, 박대통령 경축사 긍정평가…한일 관계발전에 기여(연합뉴스)**

- 일본 주요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 16일 사설과 관련 기사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마이니치신문은 ‘온당(穩當)했던 광복절 연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이후 양국 관계개선의 흐름이 반영됐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일정책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관계개선이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 같다”고 분석함.
- 아사히(朝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경축사에 한일합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전 박 대통령의 경축사와 비교하면 올해가 일본 관련 언급이 가장 짧고 최소 필요한 메시지만 담았다고 적음.

라. 한·러 관계

2016. 8. 18.

■ **[단독]러시아 부총리, 박 대통령 방러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계기되길(연합뉴스)**

-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결정을 환영하며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로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을 맡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박 대통령의 방러와 포럼 참석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는 러시아 정부 입장을 밝힘.
-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과 양국 정상회담 경제협력 의제 조율을 위한 방한을 앞두고 모스크바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방러가 양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시함.
- 박 대통령은 내달 2~3일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8. 14.

■ **中, 美 대선전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개시(연합뉴스)**

-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의 매립 작업을 미국 대선 전에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지역 평화이기 때문에 중국이 G20 정상회담 개최 전에 스카보러 암초 매립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중국이 2012년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230km 떨어진 스카보러 암초에서 필리핀 함정과 대치한 끝에 스카보러 암초에 대한 실효 지배를 굳혔지만, 필리핀과 대만은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2016. 8. 15.

■ **中, G20에 회원국 정상 전원참석·韓美와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연합뉴스)**

- 중국이 다음 달 4~5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G20 회원국 지도자(정상)들이 전원 참석할 것이라고 15일 밝힘.
- 리마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G20 관련 설명회에서 “항저우 G20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지도자들이 매우 많다”며 “G20 회원국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며 의장국인 중국이 초청한 8개국 정상과 7개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한다”고 밝힘.
- 리 부부장은 설명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중국의 결연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사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정상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함.

2016. 8. 17.

■ **美中육군총장, 사드 공방…“中에 위협 아냐” vs “적절 처리해야”(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육군 참모총장들이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간 갈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AP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16일 베이징에서 리쥘칭(李作斌)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원(사령관)을 비롯한 중국군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지난 15일부터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밀리 총장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점검할 예정임.

■ 남중국해에 中 해경선 급증·美기지 겨냥 군사무기 배치 조짐(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부근에 배치한 해경선을 대폭 늘렸다. 미국은 이를 암초의 스카보러 암초를 군사 기지화하려는 조짐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음.
- 중화권 언론은 17일 미국 국방부의 정보당국자와 접촉한 미국 매체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를 인용, 중국이 그동안 스카보러 암초 부근에 중국 해경선을 2~3척으로 유지해오다 수주전부터 한꺼번에 10여 척으로 늘렸다고 전함.
- 미국 전략국제관계연구소(CSIS)는 최근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피어리 크로스 암초(용수자오<永暑礁>)와 수비 암초(주비자오<渚碧礁>),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美濟礁>)에 중국이 항공기 격납고를 건설했다고 전하기도 함.

2016. 8. 18.

■ 중국·북한 동시겨냥·美, 동중국해에 강습상륙함 투입(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과 어선이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부근 해역에 대거 출현하자 미국이 경항모급 공격함을 투입함.
- 18일 홍콩계 봉황망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 '본험 리처드'(USS Bonhomme Richard LHD-6)호가 지난 14일 동중국해 주변을 순항하며 수직이착륙 비행기 MV-22 오스프리와 MH-60S 시호크 헬기의 야간 기동훈련을 벌임.
- 중국군 해군연구소 차오웨이둥(曹衛東) 연구원도 "강습 상륙함과 항공모함 편대의 작전능력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본험 리처드호의 동중국해 투입은 미국이 최전선에서의 존재감과 함께 동시 작전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6. 8. 16.

■ 아베, 오바마 '핵선제불사용' 구상 반대·日피폭지 반발 기류(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선언하는 방안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며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에게 이런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15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보도함.

- 일본 관계자는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관해 검토 중이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보도한 것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는 전함.

다. 미·러 관계

2016. 8. 13.

■ 美, 우크라이에 “러시아와 긴장 고조 피하라” 주문(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유격대가 러시아에 귀속된 크림반도에서 테러를 기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한 데 대해 미국이 더는 긴장이 고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함.
-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조언함.
-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도 같은 노력을 요청함.

2016. 8. 16.

■ ‘최악분쟁지’ 시리아 알레포서 “미·러 공동군사작전 거의 합의”(연합뉴스)

- 시리아 내전 격전지인 알레포가 수백만 명 민간인이 고통받는 역대 최악 수준의 분쟁지로 지목된 가운데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놓고 충돌해온 미국과 공동작전을 벌이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밝힘.
-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야 24’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 군사작전을 펴는 계획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함.
- 그는 “스위스 제네바와 요르단 암만에 있는 미국 동료들과 활발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알레포 문제에 한한 것으로, 이곳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싸우기 시작하는 계획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고 말함.

라. 중·일 관계

2016. 8. 14.

■ 日, 센카쿠열도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개발…中 반발할 듯(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

도 등에 대한 방위 강화를 위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함.

- 일본이 개발하려는 지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300km로, 미야코지마(宮古島) 등 센카쿠열도를 사정거리에 둔 인근 섬들에 2023년에 배치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편성할 계획임.

2016. 8. 16.

■ 中, 센카쿠열도 방어용 미사일은 개전시 첫 타격 대상(연합뉴스)

- 일본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방어용으로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전쟁 발발시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발끈함.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 사설을 통해 일본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될 미야코지마(宮古島)는 반드시 중국의 전략적 조준 대상이 돼야 하며 이 섬의 군사기지는 개전시 가장 먼저 뽑아내야 할 ‘못’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환구망이 ‘일본은 전쟁에서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질문에 응한 중국 네티즌의 95%가 “일본이 전쟁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고 답함.

■ 日정부, 센카쿠 해역 중선박 영상 공개(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항해하는 중국 당국 선박 등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5~9일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어선, 이에 대응하는 자국 순시선 등의 영상을 1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일본은 지난 3일 이후 중국 당국 어선이 센카쿠 접속수역 등을 계속 항해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고, 향후 센카쿠열도 방어용 신형 지대함 미사일도 개발할 것으로 알려짐.

2016. 8. 17.

■ 영유권 갈등 中日, 대테러는 협력...내달 4년 만에 협의 재개(연합뉴스)

- 일본과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대테러 대책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일본 측 테러대책 담당 대사와 중국 외교부 관리가 만나 대테러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임.

- 대테러 협의 재개와 관련, 요미우리는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지만,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협의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중일, 센카쿠 갈등 고조...中 해경선 日영해 또 침입해 日 항의(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일본은 최근 외무성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측 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중국측은 17일 해경국 선박을 일본측 영해로 진입시켰고 이에 일본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등 긴장이 이어짐.
-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최대 15척의 중국 당국 선박이 항행하는 것이 확인됨. 특히 지난 5~9일에는 28척(누계)의 중국 당국 선박이 일본측 영해까지 들어왔다가 빠져나감.

■ 中, 센카쿠주변 해상서 민병 동원 어선 합동 훈련(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이달 들어 당국 선박과 어선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했으며, 이 훈련에 민병(예비군에 해당) 1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함.
- 신문은 복수의 중국 어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들 민병이 훈련에 참가한 어선을 지휘해 센카쿠 주변 해역과 일본 해경당국의 감시활동 정보를 수집했다고 소개함.
- 그러나 중국 선박들은 16일에도 인근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해상)에서 항해를 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음.

2016. 8. 18.

■ 日, 北미사일 도발 대비 위성 상시 감시망 구축...中 견제 포석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해 우주 공간에서 각국 인공위성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방위성은 레이더와 광학 망원경을 활용한 새 감시망을 늦어도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위해 올해 예산 2억엔(약 23억원)을 편성함.
- 일본의 새 감시망은 위성 충돌이나 실패,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 상황도 함께 관측하게 됨.

■ **日, 필리핀에 순시선 첫 인도…남중국해서 中 견제(연합뉴스)**

- 필리핀 정부가 18일 남중국해 순찰과 수색구조 활동 등에 투입할 순시선 1척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함.
- 필리핀 해역에 있는 암초 이름을 따 ‘BRP 투비타하’호로 명명된 이 선박은 전장 44m로,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순시선 10척 가운데 첫 번째로 인도된 것임.
- 앞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페르펙토 아시아 필리핀 외무장관은 11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 경고함.

마. 중·러 관계

2016. 8. 14.

■ **中, G20 정상회담서 푸틴 최고 주빈 대우할 듯(연합뉴스)**

- 중국이 다음 달 초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최고 주빈으로 대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사우스차이 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함.
- SCMP는 한 고위 중국 외교관이 최근 언론에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제1 손님’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전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작년 각각 모스크바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최근 10여 차례 회동하며 신 밀월 관계를 과시함.

바. 일·러 관계

2016. 8. 19.

■ **아베·푸틴, 내달 2일 블라디보스토크서 회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한다고 러시아의 한 장관이 18일 밝힘.
- 이번 정상 회담은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9월 2~3일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기간 이뤄짐.
- 앞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마구치(山田) 현 방문을 제안한 바 있음.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8.14	美 '北외국노동자 실태보고서' 곧 의회 제출...인권압박 고삐(연합뉴스) 유럽탈북민단체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라" 국제사회에 촉구(연합뉴스)	
	8.15	미 입국 탈북자 총 200명(자유아시아방송)	
		미 NGO, 국무부에 탈북난민 수용 정책 제안할 것(자유아시아방송) 프 NGO, '북 고령화 사회' 지원 사업(자유아시아방송)	
	8.16	美HRNK "고위층 숙청 강화·여성 억압, 김정은 집권후 두드러져"(연합뉴스) 美대북인권단체, 납북의심 미국인 조사 촉구 서명운동(연합뉴스) 북 종교자유 실상 '모션그래픽'으로 고발(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인권 유린 최대 피해자는 기독교인...종교 문제 넘어 국제사회 관심 절실(연합뉴스)	
		8.17	미, 태 공사 망명에 '탈북자 보호' 협력 촉구(자유아시아방송)
		8.18	미국무부, 주영 북공사 한국행에 "北인권상황 계속 깊은 우려"(연합뉴스)
	8.19	美전문가 "재외 북한인, 탄압심화·추가탈북 상황 처할 수도"(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8.16	北, 억류 미국인 영사 접견 번번이 무시(연합뉴스)
	8.18	[단독]北 '금수저' 잇단 탈북에 해외검열단 급파...책임자 고사총 처형(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8.16	[단독] 한국, 북한인권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3국 체류 탈북자 적용 길 열어(미국의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17	정부, 대북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 공개 검토(연합뉴스) 통일부, 다양한 직군서 탈북 이뤄지는 것 사실(연합뉴스)	
	8.16	추석 이산가족 상봉 실현 어려워(자유아시아방송)	
	8.17	BBC, 망명한 英주재 北외교관은 선전담당 태용호(연합뉴스) 대북소식통 "작년·올해 北외교관 수명 탈북, 국내 들어왔다"(연합뉴스)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연합뉴스)	
	8.18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도 한국 귀순(연합뉴스)	
대북지원	8.16	유니세프, 7년 만에 北 생활환경 종합지표조사(연합뉴스)	
8.17	유진벨재단, 올 11월 중증결핵약 北전달 반출 허가받아(연합뉴스)		
8.18	NGO들 "대북 지원, 운반 등 어려움 겪어"(자유아시아방송) WFP, 북한 7월 식량배급량 300g...2분기 대비 17% 감소(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8. 14.

■ 美 '北외국노동자 실태보고서' 곧 의회 제출...인권압박 고삐(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섬.
- 미 국무부는 내주 초, 늦어도 오는 17일(현지시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짐.
- 국무부가 추후 제출할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 규모(추정치), 수감 이유 및 여건,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관, 수용소의 위성사진 등이 담기게 됨.

■ 유럽탈북민단체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라" 국제사회에 촉구(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민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회장 장만석·이하 유럽총연)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로 규정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함.
- 유럽총연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낸 성명에서 "유럽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한편, 유럽총연은 지난 12일 저녁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팝 축제' 현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유린을 폭로하는 사진전과 규탄집회를 가짐.

2016. 8. 15.

■ 미 입국 탈북자 총 200명(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 따르면 지난 11일 탈북 난민 세 명이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함. 지난 3월 이후 4개월 이상 지나 처음으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것임.
- 2005년 10월 시작된 200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 들인 후, 15일 현재까지 총 200명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함.

-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회계연도별로 보면 2007년 22명에서 2008년 37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25명을 기록함. 2010년 8명으로 주춤했지만 2011년에는 23명, 2012년 22명, 2013년 17명이었음. 이어 2014년 8명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15명 그리고 올해 8월 중순까지 14명임.

■ 미 NGO, 국무부에 탈북난민 수용 정책 제안할 것(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서 강제노역과 인신매매 등으로 고통 받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0월 27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주의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임. 탈북자의 자유를 위한 미네소타주의 민간단체(Freedom for North Korean Refugees of Minnesota) 즉 프리엔케이(FreeNK)가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임.
- 이 단체는 지난해 탈북자들의 고통을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한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결성됨.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미네소타 주 등 원하는 곳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영을 받으며 정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
- 이번 토론회에는 미네소타 주 출신 에이미 클로부카(Amy Klobuchar) 연방 상원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네소타대학의 에릭 슈워츠(Eric Schwartz) 험프리 공공정책대학 학장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강연할 예정임.

■ 프 NGO, '북 고령화 사회' 지원 사업(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en)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상반기 사업 활동을 전하고, 스위스 개발 협력청과 협력해 북한 노인들이 묶고 있는 은퇴자 시설에 온실을 설치하고, 국수나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가공 기계를 제공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또, 해외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의 조선노인보호연맹의 회원들이 외국의 노인 복지 혜택이나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중국, 인도, 즉 인디아와 태국 즉, 타이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 이 밖에도, 이 단체는 북한 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이나 은퇴자 시설에 필요한 기기 등을 지원했으며, 체육 활동, 문화 활동, 그리고 수입 마련 등에 대한 연구 사업도 펼침.

2016. 8. 16.

■ 美HRNK “고위층 숙청 강화 여성 억압, 김정은 집권후 두드러져”(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커졌으며, 이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된 상황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고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IK)가 진단함.

- HRNK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실태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압력이 커졌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과 같이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 도발과 함께 고위층 숙청이나 탈북 시도자에 대한 탄압이 함께 강화됐다고 설명함.
- 이어 HRNK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탄압 강화 또는 경제여건 개선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던 탈북민 수가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일일 수 있다고 추정함.

■ **美대북인권단체, 남북의심 미국인 조사 촉구 서명운동(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돼 남북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인 대학생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 전화에서 “데이비드 스네든 씨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2월 미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 **북 종교자유 실상 ‘모션그래픽’으로 고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사회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상을 모션그래픽, 즉 사진과 삽화를 이용해 만든 동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함.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은 두 번째 작품임.
- 이 작품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반해 제작됨. 2014년 2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한편, 이날 공개한 모션그래픽은 오는 19일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주간’ 행사와 오는 10월로 예정된 독일 베를린 북한인권 영화제에서도 상영할 계획임.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앞으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 등을 모션그래픽으로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 인권 유린 최대 피해자는 기독교인…종교 문제 넘어 국제사회 관심 절실(연합뉴스)**

-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목사는 북한 당국이 6.25 한국전쟁 이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색출, 탄압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일부 기독교인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그 곳에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후손들이 감금돼 있다고 주장함.
- 정 목사는 관리소로 보내진 기독교인들이 심할 경우 북한 군 특수부대의 살상훈련용으로 투입돼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에는 화학실험에 투입된다는 증언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함. 정 목사는 이어 1980년대 후반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가 신설된 것은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을 색출하고 감시,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함.
- ICNK 권은경 국장은 지난 2013년 유엔 강제구금 실무그룹 측에 김 씨 관련 증언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모든 것은 모략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함.

2016. 8. 17.

■ **미, 태 공사 망명에 ‘탈북자 보호’ 협력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보호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 내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처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고등난민판무국 등 국제 기구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탈북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2016. 8. 18.

■ **美국무부, 주영 北공사 한국행에 “北인권상황 계속 깊은 우려”(연합뉴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귀순한 일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 미 국무부의 카타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대변인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의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통일부는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이날 발표함.

2016. 8. 19.

■ **美전문가 “재외 북한인, 탄압심화·추기탈북 상황 처할 수도”(연합뉴스)**

-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행을 계기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탄압 심화와 그에 따른 추기탈북 증가라는 반복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전망함.
- 차 석좌는 18일(현지시간) CS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태 공사의) 최근 탈북을 계기로 북한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더 강한 단속에 나설 것이고, 이는 외국의 북한 공관이나 북한 노동자 파견지에 대한 감시·감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한편, 차 석좌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사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군사 분야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미군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사드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8. 16.

■ **北, 억류 미국인 영사 접견 번번이 무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견이 북한 당국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함.
- 엘리자베스 트뤼도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늦추거나 차단하고 있다”고 밝힘.
-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과 수교가 없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면서 이들 나라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2016. 8. 18.

■ **[단독] 北, '금수저' 잇단 탈북에 해외검열단 급파...책임자 고사총 처형(연합뉴스)**

- 외교관과 해외식당 종업원 등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의 탈북이 잇따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불같이 분노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최근 대사관, 대표부, 무역상사, 식당 등 모든 북한의 해외 파견기관들에 대해 ‘도주, 행불 등 사건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적극 제거하고, 실적이 부진한 단위는 즉각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 김 위원장은 과거 장성택을 비롯해 현영철 등 최고위층 뿐만 아니라 중하급 간부와 예술인들까지 잔인하게 처형한 전례가 있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8. 16.

■ **[단독] 한국, 북한인권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3국 체류 탈북자’ 적용 길 열어(미국의소리)**

- 한국 통일부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설명함. 이 안은 관련부처와 협의 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 놓은, 사실상의 확정 안임.
-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VOA’에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 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 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 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조치로 풀이됨.
-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작업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힘.
- 하지만 해설집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있음.

2016. 8. 17.

■ **정부, 대북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 공개 검토(연합뉴스)**

-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함.

■ 통일부, 다양한 직업군서 탈북 이뤄지는 것 사실(연합뉴스)

- 통일부는 17일 최근 북한 주민의 탈북 추세와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특정집단이라기보다 지금은 좀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빈도도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임.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외 주재원의 탈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제재국면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문제는 직접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제재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북한 외교관이 일반 북한 주민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나 행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도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TV 또는 여러 언론동향 등을 모니터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된다”고 말함. 제3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 외교관이 태용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8. 16.

■ 추석 이산가족 상봉 실현 어려워(자유아시아방송)

- 한반도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한의 이산가족들은 추석 맞이 상봉 행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음. 그러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임.
- 이는 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북한의 핵 포기과 변화가 우선임을 말해주는 대목임.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지켜보던 이산가족들은 아쉬움을 나타냄.

-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산가족과 관련한 실태 조사나 유전자 검사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남북교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힘.

2016. 8. 17.

■ **BBC, 망명한 英주재 北외교관은 선전담당 태용호(연합뉴스)**

- 가족과 함께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선전을 담당하고 있는 태용호(Thae Yong Ho)라고 영국 BBC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주영 북한 대사의 부관인 태 씨가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왔고, 아내 등 가족과 함께 런던 서부에서 몇 주 전에 자취를 감춤.
- BBC방송은 태 씨가 북한의 이미지를 영국인들에게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보도함.

■ **대북소식통 “작년·올해 北외교관 수명 탈북, 국내 들어왔다”(연합뉴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작년과 올해 복수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 대북소식통은 17일 연합뉴스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수 명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다”고 전함.
- 재작년 태국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데 이어 작년 5월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도 한국행을 선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태 공사를 비롯한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임.
- 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외교관은 북한이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키워온 엘리트 계층”이라면서 “북한의 잇따른 외교관 망명은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함.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연합뉴스)**

-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 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밝힘. 통일부는 당초

탈북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이름을 태용호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이후 태용호는 가명이고 태영호가 본명이라고 정정함.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선전 담당인 태 공사는 부인 오혜선씨(50) 및 아들 2명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전해짐.

- 정 대변인도 태 공사의 한국 망명 의미에 대해서 “북한의 핵심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지배계층의 내부결속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본다”고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함.
- 대변인은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 조사를 마친 후에 유관기관 협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2016. 8. 18.

■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도 한국 귀순(연합뉴스)

-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3등 서기관도 지난 7월 잠적했다가 최근 가족과 함께 귀순한 것으로 18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지난 7월 러시아 현지에서 잠적한 북한대사관 소속 김철성 3등 서기관이 한국행을 선택했다”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국내 들어와 관계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힘.
- 올해 들어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 외교관은 태 공사와 김 서기관을 포함해 수 명으로, 해외 근무 북한 엘리트층의 중요 조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음.

5. 대북지원

2016. 8. 16.

■ 유니세프, 7년 만에 北 생활환경 종합지표조사(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전반적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 종합지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최근 VOA와 전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과 종합지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조사는 올해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힘.
- 드 보노 대변인은 “조사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더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016. 8. 17.

■ **유진벨재단, 올 11월 중증결핵약 北전달 반출 허가받아(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다제내성결핵(MDR-TB 중증결핵) 치료시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이 우리 정부로부터 오는 11월 약품과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힘.
- 스티븐 린튼 재단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해 북한 보건성과 재단의 정기 방북 일정을 11월과 5월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11월 북한 내 1천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약품과 각종 물품에 대한 반출 승인을 한국 정부에 신청해 최근 허가를 받았다”고 밝힘.
- 린튼 회장은 “북한에서 매년 새로운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4천~5천명 발생한다”며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이 죽음의 질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함.

2016. 8. 18.

■ **NGO들 “대북 지원, 운반 등 어려움 겪어”(자유아시아방송)**

- 대북 결핵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등록 비정부단체 유진벨재단은 17일 대북 사업 성과회를 통해 지난 봄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으로 재단 방북대표단의 북한 비자 발급도 지연되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음.
- 이 재단의 스티판 린튼 회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로 유진벨재단의 ‘진 엑스퍼트’라는 진단 검사 기기 수출이 막혀, 대북 지원 사업의 확장에 지장을 줬다고 덧붙임.
-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또 다른 비정부단체 관계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달 대북 지원 등의 모니터링, 즉 감시,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 논의 차 북한을 방문한다면서 “사실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의 운송이 지연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음.

■ **WFP, 북한 7월 식량배급량 300g…2분기 대비 17% 감소(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은 18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 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힘.
- 이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배급량 360g에 비해 17% 가량 줄어든 규모이며,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서는 70g 줄어든 규모임.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천 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